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_20141120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2014.10.24.~11.20)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회

1. 복지부,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허가절차 완화(11/20)

-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외국 의사 10% 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
- 사실상 제주도처럼 '외국여사의 종사가 가능하다'는 정도로 규정이 간소화되는 셈
- 또한 외국의료기관 내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할 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을 외국 면허 의사로 하는 등의 규정을 완화. 이는 국내 진료 및 병원 운영 수준이 세계적으로 우수하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외국 의료기관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 현행 외국인 투자 비율 50% 이상, 우수 해외 소재 병원과 운영협약을 맺도록 하는 요건은 유지¹⁾

2. 원격의료 예산 2/3 축소(11/14)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2015년 원격의료 관련 예산을 당초 9억9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축소
- 복지위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 9억9000만원 중 '이용현황 조사 및 데이터 DB관리' 3억5000만원만을 예산안에 편성. 활용모델 개발(3억7000만원), 책임소재·정보보호·기기 관리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2억3000만원), 사업운영(4000만원) 등에 대해서는 삭감
- 당초 야당은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은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 사업으로 편성된 만큼 관련 법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예고해왔음. 야당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는 대신 부대의견을 통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원격의료 시범 사업 분석에 한정해 사용하도록 함
- 현재 진행 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보한 13억 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²⁾

3. 에볼라 확산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에 말리 추가(11/19)

-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7일 WHO가 최근 말리 에볼라 상황을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발표함에 따라 특별 검역 대상국을 현재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서 말리를 추가, 4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힘³⁾

한편 지난달 24일 말리에서 기니에 다녀온 2세 여아가 처음 에볼라로 사망한데 이어, 12일 에볼라로 인한 사망자 3명이 추가로 발생. 사망자 가족 중 갑자기 사망하거나 에볼라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음⁴⁾

에볼라 확산...시에라리온 의료인 잇단 파업(11/14)

- 시에라리온 남부지역의 유일한 에볼라치료센터인 반다주마 병원 간호사, 환경미화원 등 수백명의 직원들은 에볼라 안전대책과 위험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파업에 나선 직원들은 정부가 주당 100달러(약 11만원)의 위험수당에 합의했지만 9월 이후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 지난 8월에도 동부지역 치료센터에서 간호사와 직원들이 정부가 주급 50달러인 급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을 벌였고, 또한 10월 초에는 시신 매장팀 등 의료종사자들이 위험수당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파업

- 이외에도 미국에서는 안전대책을 요구하며 1만9000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이 파업에 돌입. 미국간호사연합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충분한 전신 방역복과 공기정화장비를 갖추고 에볼라 환자를 다루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 훈련을 요구했음

'에볼라 의료진' 109명 자원...의사 23명·간호사 49명(11/7)

- 보건복지부가 에볼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서아프리카에 파견할 보건의료인력을 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 복지부가 계획한 파견단 모집 인원은 1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인 셈

- 한편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시에라리온으로 파견돼 현지 조사 활동을 펼칠 예정

4. '국내 보험사 유치 허용 방안 모색-해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에게 맡겨야 하나' 국회토론회(11/11)

- 새누리당 국회의원 정희수(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명수(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주최로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환자 유치에 뛰어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마련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내 보험회사의 유치업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사의 영향력 강화 등 부작용에 대한 개선책은 논의되지 않음

- 이창우 보험연구원장은 국내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가 불법브로커의 활동 영역을 줄일 수 있고 보험회사의 전문성 및 해외네트워크를 활용,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 "불법브로커로 인한 시장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를 통한 해외환자 유치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외국 보험사의 경우 한국 의료기관과 직불계약을 하며 활동한다.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존 영세한 유치업자와의 상생을 전제로 해외환자 유치 채널 다변화 필요성을 제기. "기존 유치업자를 고려하고 국내 의료시장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

리나라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참여를 허용한다면 유치 채널이 다변화되고 자본력을 바탕으로 질 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

- 김양균 교수(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는 산업적 측면에서 보험회사 참여로 경증질환 위주의 해외환자 유치에서 중증질환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을 제기. “현재 해외환자들의 평균 입원 일수가 3일이다. 이는 해외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국내보험회사의 유치 허용으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하며 중증질환으로의 변화를 피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역시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업 허용에 긍정적인 뜻 표명. “해외환자 유치 채널 다변화 및 시장 질서 확립,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태”, “국내 보험회사 참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정상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 “의료 공공성에 대한 경험과 어우러져 국내 보험회사가 산업적 측면에서 기여할 부분이 있을 것”, “보험사 유치 참여가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은영 보건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과장)⁵⁾

5. 보건의료산업 동향

분당서울대, 병원정보시스템 중동 수출 박차(11/19)

- 분당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 이지케어텍과의 3사 컨소시엄을 통해 설세 없이 중동 시장 진출에 박차

- 19일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리는 ‘사우디 이헬스 콘퍼런스(Saudi eHealth Conference 2014) 전시회’에 3사 컨소시엄이 참여,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힘

- 이 전시회에서 3사 컨소시엄은 중동시장 진출의 핵심이 될 국제 표준 병원정보시스템 ‘베스트케어(BESTCare) 2.0’의 영어·아랍어 버전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또 개인용컴퓨터(PC)나 모바일 등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고 의료진이 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인 대시보드(Dashboard) 및 모바일 전자의무기록(EMR), 전자동의서를 공개

한중 FTA 사실상 타결...제약의료기기업계 장밋빛(11/11)

- 한중 FTA 타결로 중국이 관세철폐, 규제 완화 입장을 공식화함에 따라 제약·의료기기 시장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번 FTA 타결이 갖는 의미는 지금껏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의약품·의료기기 기준·규격 및 인허가 절차에 높은 진입장벽을 유지했던 중국이 한국에게만 다소간 벽을 허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점: 한미약품, 녹십자, 동아쏘시오홀딩스, 대웅제약, 보령제약, LG생명과학 등 향후 신성장동력으로 내수 시장 보다 중국 등 해외 진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다수 국내 제약사들에게도 한중 FTA 타결은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큼

- 양국은 제약·의료기기 허가 시 혜택 부여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책임기관 또는 규제당국이 참석한 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은 세계 기준이 60일 가량인데 비해 빠르면 1년, 보통 2년 정도 소요돼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허가완료까지는 제네릭(복제약)이 84개월, 신약은 50개월 이상이 걸렸음. 또 외국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아 한국에서 허가된 제품도 현지 임상을 다시 해야 했는데, FTA로 이런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

- 중국 의료기기 시장은 약 141억달러로 세계 4위권 규모로, 의료기기 역시 특혜관세에 따라 단기적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 중국 정부가 의료기기 산업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면서 2008년 이후 연평균 22.9% 급성장⁶⁾

- 남점순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은 “한중 FTA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서 FTA 발효 이후에도 당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설명. 다만 “중국이 최근 선제적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보라매병원 건강검진 마일리지 논란, 복지부 시정명령(11/19)

-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검진비를 할인해 주고, 해당 직원에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보라매병원에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함

- 보라매병원 마일리지 적립 논란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이 교직원 소개로 건강검진을 하면 수검자에게 패키지 검진비를 10% 할인해주고, 소개한 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촉발

- 병원은 종합건강검진센터가 적자여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병원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직원 마일리지 제도 중단을 10월부터 요구했지만 병원은 답변이 없는 상태


"Best for Most" BEST CARE FOR MOST

보라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 “마일리지 제도”안내

보라매병원 종합건강진단센터가 검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 검진 마일리지 제도란?**
 본 센터는 교직원 소개로 검진을 한 경우 수검자에게는 **패키지 10% 할인**,
 직원에게는 수검자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14년 8월 11일 부터 ~**
- 대 상 : 보라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교직원**
- 책정방식**
 - 결제금액의 **4%**를 마일리지로 부여
 - **첫 소개, 초진 시에만 적용**
- 사용방식**
 - 지금부터 소개하고 전산 구현이 완료되는 **2014년 11월 이후** 부터 사용가능
 - 본 종합건강진단센터에서만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직원 본인의 요청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
 - 직원 본인의 퇴사 시 마일리지 소멸

교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병원명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6. 제약 및 의약품

동아ST ‘스티렌’...급여제한 소송 승소(11/13)

- 13일 서울행정법원 12부(이승한 재판장)은 동아ST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티렌’ 약제급여기준 변경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취소판결. 이에 따라 동아ST는 ‘위염 치료’와 ‘위염 예방’ 두 가지 적응증 모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으며, 600억원을 복지부에 상환하지 않게 됨

앞서 복지부는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5월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할만한 임상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동아ST는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 또는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음

이에 복지부는 올해 4월 1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제한 및 600억원 규모 환수(환수 기간은 2011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를 명하는 행정조치를 내렸고, 동아ST는 임상자료를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지난 3월 총 환자 520명으로 임상시험을 종료하며 효능을 입증했다고 밝힌 바 있음⁷⁾

7. 기관·협회 뉴스

전의총, 불법 의료행위 한의원 무더기 고발 / 한의협, “악의적 고발”(11/17)

- 전국의사총연합이 최근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등 불법이 만연하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 동부 및 경기 지역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조사결과 이 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 물리치료행위와 부항, 뜸 등을 실시한 것이 확인하고 이들 한의원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

- 전의총은 무자격자에게 불법적으로 부항과 뜸 등 한방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혐의가 있는 한의원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비 환수할 것 촉구

- 한의사협회는 전의총의 불법 한방의료행위 주장을 반박하면서 고발 취소를 촉구. 한의협은 17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부항과 뜸 시술을 진행한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

- 전의총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의원 20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이후 17곳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고발했는데,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됐고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처벌을 받음⁸⁾

검찰, 입법로비 의혹 전 치협회장 소환조사(11/11)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회장을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힘

- 검찰은 협회 주변 계좌를 추적,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한 2011년부터 올 초까지 모금을 통해 모인 25억여원 중 약 9억원이 현금 인출된 사실을 확인한 상태⁹⁾

건보공단 직영 서울요양원 개업(11/1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인 서울요양원이 11일 개업
- 건보공단은 시행 7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표준 서비스와 적정의료비 등 표준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울요양원을 건립하게 됐다고 설명10)
- 김춘진 위원장 “서울요양원, 김종대 마지막 걸작”

보건노조 차기 위원장에 유지현 현 위원장 단독 출마(11/6)

-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7기 지도부 선거에 위원장 유지현, 수석부위원장 최권종, 사무처장 한미정 후보조가 단독 등록. 유지현 위원장 후보는 지난 1998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노조를 건설한 이후 첫 연임에 도전한 후보
- 제7기 지도부 선거는 10일부터 24일까지 선거 유세기간을 거쳐 25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11)

1만여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11/6)

- 대한간호협회는 6일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2014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
- 김무성 대표, 나경원 의원, 신경림 의원(이하 새누리당), 문화상 비대위원장(새민련) 등 여야 정치인 20여명 참석
- 한편, 이날 간협 정책선포식 행사장 밖에서는 간호인력개편안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수호를위한전국간호사모임(이하 건수간)은 ‘간호인력 3단계 주장하는 간협은 누구의 편인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간호인력 개편안 규탄 기자회견

8. 법령안 진행 상황 (* 4차6차 투자활성화 대책 진행상황 별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입법대상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적용)

제·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외국의료기관 설립요건 중 외국 의사 확보의무 변경(안 제20조의2)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외국 의사 10퍼센트 확보의무를 폐지할 예정으로, 외국 의사 수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율’에서 ‘기준’으로 변경함.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 보도자료 발표(11/20), 12/31까지 입법예고

제·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비율과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기구 구성시 외국 의사 포함 비율 등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 제2호 개정)

1) 의사결정기구의 장은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2) 의사결정기구의 장과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퍼센트 이상을 운영협약 맺은 의료기관에 소속된 외국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나.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의 비율(안 제5조 개정)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10퍼센트) 삭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 다음주 화요일 발표 예정

- [입법대상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적용) | 법제처제출(2014. 11. 17.) | 시행(2015. 1. 1.)

제·개정이유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의료기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같은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과 같거나 유사”한지 여부에 대해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함께 평가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도록 절차의 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검토사항에서 제외(안 제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기 등의 품목 허가 단계에서 기존기술인지 여부를 우선 평가하고 기존기술을 제외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함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검토사항에서 기존기술 여부 판단을 제외함

나.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 단축(안 제4조)

기존에 신의료기술평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평가 대상여부를 통보하던 것을 80일 이내에,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28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기간 단축

9. 기타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24만 세대 건보료 인상(11/19)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힘.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24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반면 131만 세대의 보험료는 감소

-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음. 올해에는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728만 세대(96.7%)에서 373만 세대(51.2%)는 변동이 없고, 131만 세대(18.0%)는 보험료가 인하, 224만 세대(30.8%)는 보험료가 인상.

-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241억원(3.7%)이 늘어나며, 세대당 평균 3,317원 증가¹²⁾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11/17)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

-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됨)

-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받기로 하고,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함¹³⁾

정의화 국회의장, 일본식 선택분업 도입 주장(11/13)

- 정의화 국회의장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차 Korea Healthcare Congress(KHC)' 개최식에서 축사를 통해 "의약분업도 더 이상 이렇게 가선 안된다"며 "최소한 일본식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와 의료수가 현실화도 강조. "대한민국은 자유경제와 자본주의 체제임에도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과격한 수가통제를 당연시하고 있다", "병원이 질식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정치권과 정부는 엄살을 떠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¹⁴⁾

- 약사회는 국회의장 사퇴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의장실을 향의 방문

갑상선 과다 조기검진이 암 발병 증가 입증 논문 발표(11/12)

- 갑상선암 과다 조기검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암 발병과 검진의 상관성을 입증한 첫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 더욱이 이번 논문은 세계 의학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적잖은 파급력이 예상
- 고려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 연구팀 ‘한국 갑상선암 검진과 진단율’이라는 제하의 논문은 조기검진을 갑상선암 증가의 직접적 원인으로 규명한 최초 논문. 실제 국내 갑상선암 발생률은 1993년 대비 2011년 15배 이상 증가
- 연구팀은 "점차 작은 크기의 갑상선암 수술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불필요한 조기검진 때문"이라고 지적¹⁵⁾

시간제일자리 간호사 많은 병원 간호등급 유리하도록 산정기준 개선 고시안 행정예고 (11/11)

-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 고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 함. 정부가 시간제일자리 간호사를 간호등급 산정에 포함시키는 등 확대 방침을 마련함에 따라 향후 간호사들의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주당 근무시간	현행				개선(안)
	상급종합, 의원, 한의원	서울 종합병원	서울 외 종합 병원	의료 취약지	
16~23시간	0	0	0	0	0.4
24~31시간	0	0	0.4	0.5	0.6
32~39시간	0	0	0.6	0.7	0.8
40시간 이상	1	0.67	0.8	0.9	1

* 8시간 3교대 근무가 일반적이므로, 산정 구간을 32시간, 24시간 등으로 변경

-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인정 기준을 신설하고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하기로 함.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16~24시간 미만 0.8명, 24~32시간 1.2명, 32시간 이상 1.8명 등으로 산정. 다만 야간전담간호사 산정기준은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및 병원, 의원 등에만 적용¹⁶⁾

원주세브란스병원 내과 1년차 7명 파업(11/7)

- 원주세브란스병원기독병원 내과 전공의 1년차 7명이 지난 2일 새벽 6시부터 파업에 돌입
- 이들의 파업원인은 항간에 알려진대로 ‘과도한 업무량’이 아닌 ‘전공의 지원미달’로, 내과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추가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 내과 1년차 전공의들은 “기독병원 전공의 인원감축, 임상교수 증가로 각 연차당 업무량이 증가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촉탁의 고용을 강조했다지만, TFT에서는 당직 체계 개선, 술기 교육 등 부수적인 요소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¹⁷⁾
- 한편 병원은 촉탁의 고용 및 당직제도 변경 등을 통해 전공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전공의 교

육을 확대하는 등 개선 추진. 병원은 현재 촉탁의 고용을 위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등 레지던트 업무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무엇보다 1년차 전공의 로딩 중 가장 큰 부분인 주중 야간 응급실 당직을 ‘스태프 콜’로 전환기로 결정. 이에 따라 전공의 1년차는 주중에 응급실 콜을 받지 않아도 되며 당직 역시 3일에 한 번씩 설 수 있도록 당직체계(OFF-OFF-당직)로 개선¹⁸⁾

-
- 1) ‘복지부, 경제자유구역 외국 의료기관 허가절차 완화’, 2014.11.20., <메디파나뉴스>
 - 2) ‘원격의료 예산 9억9000만원→3억5000만원’, 2014.11.14., <데일리메디>
 - 3)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 말리 추가’, 2014.11.20., <메디컬투데이>
 - 4) ‘말리 수도시 에볼라 사망자 3명 추가…확산 우려 제기’, 2014.11.13., <매일경제>
 - 5) ‘한국 보험회사 ‘해외환자 유치’ 뛰어들다’, 2014.11.12., <데일리메디>
 - 6) ‘한중 FTA 타결…제약·의료기기 미소’, 2014.11.11., <데일리메디>
 - 7) ‘기사회생한 동아ST ‘스티렌’…급여제한 소송 승소’, 2014.11.13., <메디컬투데이>
 - 8) ‘전의총 “무자격자가 부항·뜸 한의원 32곳 고발” ↔ 한의협 “악의적 고발”’, 2014.11.17., <라포르시안>
 - 9) ‘검찰, 입법로비 의혹 전 치협회장 소환조사’, 2014.11.11., <국민일보>
 - 10) ‘건보공단 서울요양원 개원’, 2014.11.10., <한국경제>
 - 11) ‘보건노조 차기 위원장에 유지현 현 위원장 단독 출마’, 2014.11.6., <청년 의사>
 - 12)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224만 세대 건보료 인상’, 2014.11.19., <청년 의사>
 - 13) ‘복지부·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착수’, 2014.11.17., <약업신문>
 - 14) ‘국회의장 “일본식 환자 선택분업으로 바뀌야”’, 2014.11.13., <의학신문>
 - 15) ‘한국 갑상선암 증가=과다 조기검진 ‘입증’’, 2014.11.12., <데일리메디>
 - 16) ‘시간제일자리 간호사 많은 병원 간호등급 ‘유리’’, 2014.11.11., <데일리메디>
 - 17) ‘원주세브란스병원 내과 1년차 7명 파업’, 2014.11.7., <데일리팜>
 - 18) ‘내과 전공의 파업 원주세브란스병원 결단’, 2014.11.13., <데일리메디>